

인권경제를 통한 빈곤 퇴치

2023. 10. 6.(금) 20:00-22:30

주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리얼발런베리인권연구소,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 인권위원회, 광주국제교류센터

배경

지방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뿐 아니라 국가 인권 의무의 실질적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하여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선택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세션에서는 인권 실현의 강화를 통해 빈곤을 줄일 수 있는 경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채택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세션의 목적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경제 정책 및 의사 결정에서 인권 원칙과 의무를 보다 잘 통합하기 위한 도전과제 및 혁신 솔루션의 파악이다. 구체적으로 지방 정부의 예산에 대한 결정, 세금 정책, 부패방지 노력이 있으며, 사회보장, 양질의 교육, 보건의료, 주택, 식량, 물, 위생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한 최대 가용 자원의 할당 역시 이에 해당한다.

인권 경제는 경제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경제 정책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의된다. 인권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특히나 영향을 받는 개인, 그룹 및 커뮤니티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공간, 조사를 위한 공간 및 참여를 위한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예를 들어 인권 기반 예산 분석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관련 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관련 지표와 조치는 예산의 배분과 지출이 인권을 준수하여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이다.

목표



- 경제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의사 결정을 통해 지방 정부가 빈곤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 지방 정부의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경제 정책 및 의사 결정에서 인권 원칙과 의무를 보다 잘 통합할 수 있는 모범 사례, 유망한 이니셔티브, 도전과제 및 혁신 솔루션의 공유.

